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18호

### “스포츠혁신위 권고 2년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반론

#### 스포츠 혁신은 ‘이상’이 아니라 시대의 ‘사명’이다

글 / 이병호 학교체육진흥회 체육인재육성회 위원

### 정운수의 오피사이드

1. 모두를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되려면
2. 선수들의 노동자성 획득이 필요하다

글 / 정운수 스포츠평론가, 성공회대 교수

### 도쿄올림픽

#### “올림픽 때 코로나 걸려도 개인 책임” IOC 동의서 논란

글 / 이세원 연합뉴스 특파원

### 『국제일반』

“성전환 소녀는 왜 여성부 출전 못 하나요…美서 소송”  
“육설에 인종차별…외신까지 주목하는 스포츠계 악플러”

### 기사 모아보기

### 체육시민연대 소식

###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 체육시민연대 CNet포럼

- ◇ 일시 : 6/25(금), 오후4시~5시30분
- ◇ 방식 : 실시간 온라인(유튜브)
- ◇ 주제 : 스포츠클럽법 의미와 영향

발제 및 토론자, 링크 등은 추후 공지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병호 mlponty

기사 30건 구독자 0명 교육

# 스포츠혁신은 '이상'이 아니라 시대의 '사명'이다

지난 6일 <한겨레>에 실린 <스포츠혁신위 권고 2년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기사를 읽고 스포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아직 왜곡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웠다. 글의 요지는 스포츠혁신위원회(아래 혁신위)의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 권고가 '이상'이었으며 '현실'과의 차이를 드러내 결국 "절반의 성공 정도만 거뒀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다.

2019년 초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혁신위 권고안의 기조는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이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 실행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현장 또한 변화하지 못했다. 그런 사이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을 일어났음에도 실행기관의 구태를 탓하지 않고, 혁신위 권고내용과 그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혁신위는 소년체전 폐지가 아닌 '발전적 전환'을 권고

첫째,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년체전 폐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소년체전 폐지'라는 말은 권고안 어디에도 없다. 혁신위가 '학생스포츠축전'으로 발전적 전환을 권고한 것은, 중등부와 고등부를 통합하고, 전체 학생의 60%가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와 통합을 통해, 고사 위기에 처한 학교운동부를 일으키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스포츠 천재 발굴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전국체전 기간 고등부 학생선수들은 일반 성인 선수와의 합동훈련과 대회 중 함께 합숙하는 과정에서 매우 비교육적인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다. 사실 전국체전에 고등부가 분리되지 않은 이유는 교육적인 고려가 아닌, 경기력과 진학·진로 관련 등의 고려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기자의 주장처럼 2025년까지 '전국체전 개최 장소가 결정돼' 있고, '고교 학생선수를 빼면 대회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국체전에 고등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학생선수를 운동선수로만 이해한 판단이다.

## 스포츠인권전담기구는 권고대로 즉시 설치했어야

둘째,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에 혁신위가 2019년 5월 7일 가장 먼저 권고한 내용이다.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스포츠 현장의 변화를 위해 즉시 설치과정을 밟았어야 했으나, 역시 실행기관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이듬해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설치에 착수하였으나, 권고내용의 핵심인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추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갖추지 못하며 진통 끝에 초대 이사장이 사임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 주중대회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 이유

셋째, '학생선수들의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이 사실상 답보상태'인 것은 경기단체에서 수십 년간 학생선수의 교육 권리를 무시하며 주중 대회를 운영해온 관행을 깨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선수, 지도자, 학부모의 태도나 관성은 대회 개최 권한을 가진 경기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대회 수를 대폭 축소하지 않고도 주말과 휴일 및 방학 기간 등에 대회를 개최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의 본질은 학생들이 수업해야 할 시간에 훈련에 참여하고 대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처럼 수십년간 관행으로 굳어져 온 부분이다. 수십 년간 이어온 주중 대회 관행으로 인해 소위 '운동도 공부'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들고 아예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말 대회 전환 과정이 다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어른들이 감수해야 할 당연한 일이지 않은가.

##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넷째,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의 혁신이 입시제도 등과 연결돼 있어서 어렵다는 것 또한 시대변화를 직시하지 못한 판단이다. 대회 수는 주말 대회를 통해서 전혀 축소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대회를 전국규모로 개최하는 경기단체의 관행에서 벗어나,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학생선수 대회를 주관하는 별도 기구 설립을 통해 대교경기가 지역별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또한 대입 체육특기자 정원은 이미 많은 대학에서 축소하는 추세이고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선수를 선발하는 다양한 전형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전형방식에 발맞춰서 입상실적에 매몰된 과거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 진정한 혁신은 본체를 바꿔내는 의지와 실천

스포츠 혁신의 필요성은 너무나 불합리한 '현실'이 만연하고 있는 현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때마다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의 '현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이상'적이라는 이유로 개혁의 요구를 회피해 왔다. 그렇게 회피하고 외면하는 사이 우리의 학교운동부 현장과 스포츠 현장은 폭력과 인권 침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혁신이란 거죽을 흘랑 벗긴 뒤 태어나는 어려운 일"임에 동의한다. 그러나 선수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에 눈감는 것이 어찌 혁신을 위한 '지혜'일 수 있는가. 애초에 '선과 악'을 구분한 것은 혁신을 '현상 유지'의 시선에서 바라본 자들의 이유였다. 권고 이후 2년이 지난 현재도 인권유린 '현상'이 '현장'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본체를 혁신해내려는 의지와 실천 없이, 일회성 제스처로 적당히 시간에 묻히기를 바라는 것이 스포츠 혁신의 의지일 수 있겠는가.

# 모두를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되려면

정윤수  
스포츠평론가, 성공회대 교수  
2021.05.27

지난 21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갈등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각을 세워 보도하는 스포츠 저널리즘의 속성상 이 법의 의미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는데, 한국 스포츠의 재건과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문화 형성에 이 법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문체부 발표에 의하면 '누구나 일상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전문선수 육성의 저변도 확대되며 체육인의 일자리도 창출된다. 스포츠평등·인권침해의 이유로 지목되는 '성적 지상주의'가 완화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충분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문체부의 발표대로 '체육활동 참여 확대, 선수 저변 확대,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하는 스포츠클럽법 제정은, 첫 단추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이 법 하나로 '일타삼피'가 자동적으로 획득되지 않는다. 보다 상위의,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스포츠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스포츠기본권'의 실현까지 도모해야 한다.

정부와 학계 및 체육계가 지난 십 수년간 논의하고 추진해온 스포츠클럽은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그 정책과 사업에 투여되는 자원을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자발적 회원 가입, 민주적 의사결정, 자율적 운영, 지역공동체의 결속 등이 스포츠클럽의 대전제다.

이런 전제에 의하여 스포츠클럽은 활기찬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스포츠클럽의 활동가와 참여자들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활력 창출의 기획자가 되고, 학교 교과 외의 사회 교육을 담당하는 매개자가 되며, 궁극적으로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회 관계망을 형성해내는 촉진자가 된다. 스포츠클럽 제정 과정에서, 정부와 스포츠계가 과연 이러한 인식과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자칫 이 법이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고, 여유 있는 사람이 더 여유를 즐기는' 차원으로 그 사업 범위가 제한되고 '체육인 일자리 창출' 또한 체육인의 사회적 삶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으로 확장되지 않고 계기적이고 기능적인 결합 정도로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렇게 제한되고 축소되면, 이 법은 특정 분야의 이권이나 이해 관심사로 그 의미가 줄어들게 된다.

부산복지개발원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가난한 동네가 인정이 넘치고 서로 도우며 살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부산의 '부유계층 밀집마을 가구주의 경우 취약계층 밀집마을 가구주보다 사회적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교육, 문화 및 특히 스포츠시설의 만족도는 싹쓸이처럼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관계 맺기를 촉진한다.

물론 이는 일종의 '내부적 네트워킹을 통한 폐쇄적 네트워크'의 속성 또한 있지만, 어쨌거나 스포츠시설을 포함한 제반의 사회문화 기반이 충분한 집단일수록 사회 관계망의 형성 욕망과 밀착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위 보고서와 여러 사회계층 실태조사를 참조하면, 가난한 마을일수록 사회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고 개인 건강의 도모가 여의치 않으며 상호부조적인 관계망 형성도 어렵다. 저녁이면 페타이어로 주차공간부터 확보해야 하는 가난한 동네에서 사회 관계망 형성을 고려하기란 쉽지 않다. 스포츠클럽법은 바로 이런 상황의 점진적 해결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흔히 거론되는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북구 선진국 사례'도 갑자기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스포츠클럽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노동운동, 지역운동, 교육운동의 민주적 전개 과정 속에서 스포츠클럽이 자연스럽게 동반하였고 또한 스포츠 고유의 특장을 살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몸으로 서로 느끼고 교류하는 '과정의 민주주의'를 아름답게 실천하였던 것이다. 스포츠클럽법은 이러한 의미를 분명하게 실천하여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육계 일자리 창출'로 축소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복잡한 이해와 갈등관계로 뒤엉켜 있는 현재의 문제적 상황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으로 작동할 우려마저 있다.

# 선수들의 노동자성 획득이 필요하다



정윤수  
스포츠평론가, 성공회대 교수  
2021.05.27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스포츠인권'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스포츠(교육) 현장의 인권 실태를 다각도로 조사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선수들을 조직해 전국적으로 인권 특강을 실시했다. 분명하고 뚜렷한 정책 권고를 낸 바 있다. 아울러 그 과정을 총괄하는 사업으로 2010년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를 정부의 유관부처, 무엇보다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원칙들이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른 2021년 현재, 한국스포츠의 인권 상황은 적어도 '조재범 코치 가해 사건'이나 '고 최속현 선수' 사례와 같은 사건 중심으로 봤을 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대한체육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며, 성추행 및 강간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대한체육회, 스포츠(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2018)했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스포츠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고의로 왜곡·무시했다.

그런 까닭에 10여년 전 사건 대응책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벌이던 상황과 달리 지금은 좀 더 치밀한 관점 활용과 현장적용이 필요해졌다. 다음의 몇 가지 관점이 특히 중요하다.

## 스포츠 폭력 이뤄지는 시·공간 주목해야

첫째로 2010년 무렵은 스포츠 '폭력'이 주로 지도자나 선배의 개인적 일탈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그것이 이뤄지는 시·공간을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 한국 스포츠의 훈련 및 환경 특성상 (학생) 선수들은 '단체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단체 생활의 '시·공간 구조'가 이른바 '개인적 일탈'의 배경이 된다. 심할 경우 그러한 조건의 구성원 전체가 가해·피해의 심각한 갈등관계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 혹은 '선후배 간의 장난'이라고 흔히 변명되는 반복적인 괴롭힘은 바로 이 폐쇄적인 '시·공간 구조' 안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시간의 혼육, 공간의 압박, 일상의 통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둘째로 성별·세대별·종목별로 섬세한 판단이 필요해졌다. 가령 2017년 기준 초·중·고 여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율은 전국적으로 13.8%(남학생 16.3%)이고 방과후 스포츠클럽 참여율은 4.9%(남학생 8.8%)에 머문다. 남녀학생 공히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 때문에 체육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로커룸과 샤워실 같은 시설의 부족, 남녀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 여학생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남학생 중심의 학교체육 관행 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다음 장 계속

## 개인의 폭력 넘어선, 사회의 혐오·차별

셋째로 특정 개인에게 가해지는 특정 개인의 폭력을 넘어서, 그러한 사건들을 조망하는 시선을 한국 사회 전반의 일반적 상황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년 전부터 국제축구연맹(FIFA)과 유럽축구연맹(UEFA)이 축구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행위를 근절하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다양한 캠페인(Respect)을 벌여 왔다. 이를 소개·중계·안내하는 국내의 스포츠 미디어는, 이 'Respect'를 '스포츠 경기 중의 심판·선수·감독의 규칙 준수'로 오인하거나 유럽 사회의 인종차별에 대한 캠페인 정도로 축소하고 있다.

보편·특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또는 스포츠)는 유럽에서 흔히 발견되는 '인종차별'이 드물거나 그 정도가 약하다고 쉽게 판별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의 본질적인 요소, 즉 '혐오와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특히 스포츠)에서 만연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상적으로는, 우리의 여러 경기장에서 유럽과 같은 인종차별이 확연히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 세계 수많은 선수들이 밀집하는 유럽의 경기장과 우리의 현황을 기계적으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본질은 '혐오와 차별'이고 나라마다 그것이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 팬들의 발언이 즉발적이라면 그 종목에 관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랜 위계질서에 따른 폭력적 발언이나 차별의 시선이 구조적으로 드리워져 있다. 생중계 와중에도 거친 말을 하는 감독이 있을 정도다. 체육계열 학과에서 '여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성차별 및 혐오와 배제 또한 심각하다. 방송 중계에서 '용병'이란 말이 사라지고 '외국인 선수'라는 말로 '순화'됐다 해서 우리의 스포츠에서 혐오와 차별이 줄고 있는 게 아니다. 아니, '용병'이란 말도 일부 중계나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 스포츠선수, 노동법으로 보호하자

마지막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공유해야 할 새로운 과제는 스포츠 선수들의 '노동자성'을 공론화하고 사회화하는 것이다. 몇 해 전부터 청소노동자와 골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방송작가를 포함한 문화예술계 노동자와 택배·플랫폼·프로그램 개발 등의 영역에서 일차적으로 그 '노동자성'을 공론화해 획득하는 흐름이 일고 있다. 여기에 스포츠선수들이 포함돼야 한다.

스포츠 활동이 다른 '노동'과 달리 자신의 목표 실현과 쾌락의 추구라는 측면이 있고 개별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노동법상 '계약적 노무제공 관계'라고 부르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프로 스포츠 선수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연구보고서 등에서 꾸준히 밝힌 것처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무제공이 주된 내용이 되는 계약관계에서는 항상 사회법적 보호필요성 여부가 검토"돼야 하며 무엇보다 "거의 모든 스포츠 활동은 언제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 위험"을 안고 있다. 나아가 권혁 교수는 "스포츠 활동이라도 노동법상 의미를 가지는 노동활동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스포츠 활동이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 스포츠 활동은 근로활동으로서의 속성을 가지며, 노동법의 보호대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검토와 현실적 실현 추구가 필요하다. (학생)선수들이 "자신이 좋아서 선택"했다거나 "신성한 스포츠를 노동으로 폄하"한다거나 "개별적으로 일시 계약을 맺는 경우라서 일반적 노동자성이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사회적 의의와 (특수)노동의 법적 근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선수들의 노동자성 획득은 기본적으로 개별 선수들의 취약한 노동(운동) 조건과 계약 관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정체성 획득의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스포츠가 갖는 사회적·문화적·인권적 의의를 동시에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 IOC “코로나 걸려도 우리는 책임없다”

## 동의서 요구 논란

YONNAP NEW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와중에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려는 구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회로 인해 코로나19에 걸리면 '본인 책임'이라는 서약을 요구해 논란을 낳고 있다.

라나 하다드 IOC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제네바 현지시간 27일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주최자는 면책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다드 COO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있는 정부나 보건 당국은 없다. 우리 모두가 떠안아야 할 위험"이라며 코로나19 감염은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동의서 제출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새로운 조건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뤄졌다"며 다른 주요 대회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정리한 책자인 '플레이북'에는 "온갖 배려에도 위험이나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책임 아래에 대회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는 기사가 포함돼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올림픽이 참가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한 상황에서도 '주최 측 면책'에 동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이번 동의서는 중태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이례적인 내용으로 돼 있으며 이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적어도 최근 6차례의 하계·동계 대회 동의서에 '감염증'이나 '사망' 등의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도 마찬가지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sewonlee@yna.co.kr](mailto:sewonlee@yna.co.kr)



# “성전환 소녀는 왜 여성부 출전 못 하나요” 美서 소송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학생 선수의 여성부 출전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과 웨스트버지니아 지부는 이날 성전환 소녀 베키 페퍼잭슨(11)을 대리해 주와 해리스 카운티 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맹은 성명을 통해 "성전환 청소년들도 다른 학생들처럼 스포츠팀에 들어가 운동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크로스컨트리 육상 선수인 잭슨은 "난 그저 달리고 싶을 뿐"이라며 "그저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싶은 나 같은 아이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 4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의 학교 내 여성부 팀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UCLA 법학전문대학원이 2017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자신을 성전환자라고 밝힌 13~17세 청소년은 약 1150명으로, 전체의 1.04%에 이른다. 미국 50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성전환 선수들이 여성부에 출전하면 신체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단체 등에선 해당 법안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앨라배마, 아칸소, 미시시피, 테네시, 몬태나 주 등에서도 같은 법이 올해 발효된 상태다. 이와 함께 미 전역에서 유사 소송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욕설에 인종차별’... 외신까지 주목하는 스포츠계 악플러

"너는 프로 선수가 아니다."  
"너는 쓰레기다! 타이완으로 돌아가."

키움 외국인 투수 제이크 브리검이 오늘(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일부 팬들이 보내온 영문 다이렉트 메시지 욕설을 공개했다. 한 야구팬은 브리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너는 프로 선수가 아니다. 쓰레기다. 은퇴하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또 다른 팬은 "너는 키움의 수처다. 타이완 리그로 돌아가라."라고 공격했다. 심한 욕설을 접한 브리검은 충격을 받은 듯하다.

키움 관계자는 "최근 선수들의 소셜미디어에 악성 DM(다이렉트 메시지)이 종종 와 선수들이 상처받는다"고 말하며 "선수의 사생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단 차원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이완 프로야구 웨이추안 드래건스에서 뛰었던 브리검은 지난달 대체 선수로 키움에 다시 합류했다. KBO리그 복귀 후 3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2.55로 호투 중이다. 어제(27일) KIA전에선 5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다. 네티즌들이 욕설을 한 건 KIA전 직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브리검의 투구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단 측은선 토토 등을 하는 일부 극성 팬들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야구 뿐이 아니다. 귀화 농구 대표 선수 라건아도 지난해 1월 심한 욕설 메시지를 받았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는 라건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에게 온 개인 메시지를 캡처해 올려 충격을 안겼다. 라건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 팬은 라건아에게 비난과 욕설을 퍼붓고, 인종차별 단어로 폭언했다. 이에 라건아는 "매일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 보통은 차단하지만 매일 이런 것들을 견뎌야 한다"고 토로했다.

훈혈인 전태풍도 귀화 11년째지만, 인종차별에 시달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2년 전 인삼공사에서 뛰었던 브랜든 브라운도 인종차별 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KBL은 우선적으로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10개 구단 귀화선수와 외국인 선수를 대상으로 모든 인종차별 피해사례를 조사한 후 대응할 방침이었지만 선수들의 사생활 영역이다 보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스포츠뉴스와 연예면에 댓글 서비스를 없애는 등 조치를 했지만, 악플러들은 소셜미디어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선수들을 공격하고 있다.

SSG 랜더스 최주환은 최근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네티즌을 상대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 악플러들의 행태는 외신에도 소개될 정도로 악명높다. 타이완 매체 자유시보는 오늘 "타이완에서 활약했던 브리검이 한국 악플러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며 "몇몇 팬들은 브리검에게 타이완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성숙한 스포츠 관람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 체육시민연대 소식

## 체육시민연대 CNet포럼

일시 : 6/25(금), 오후4시~5시30분

방식 : 실시간 온라인(유튜브)

주제 : 스포츠클럽법 의미와 영향

발제 및 토론자, 링크 등은 추후 공지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경북철인3종협회는 유령단체?... "회장은 연락두절, 사무국도 없어"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43962?ref=naver>

[박창진 칼럼] 스포츠 인권 보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524500049>

[대한항공 탁구팀 괴롭힘上] 사측, 조사 착수...피해선수 "입단 전부터 당했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525500012>

[야구] KBO 리그·대학야구 활성화 위해 얼리 드래프트 제도 도입!!

<http://www.mre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752>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 11억원 기부...스포츠 저널리즘 육성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5290018&t=NN>

스포츠무대의 성소수자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714190000267?did=NA>

한국체육정책학회, 한국스포츠현안과 정책 방향 춘계세미나 개최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5290611003&sec\\_id=530101&pt=nv](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5290611003&sec_id=530101&pt=nv)

용인시의회, 스포츠인권 보호·증진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 열어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2519498034043>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